



올바른 교육 개혁의 주체 - 교수 노조



오 세 철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I. 어제와 오늘

4·19 혁명 직후 노동 조합의 건설 투쟁이 힘차게 전개되는 가운데 교원 노조의 건설도 함께 이루어졌다. 그러나 5·16 쿠데타에 의해 교원 노조는 불법화되고 지도부를 포함한 교사, 교수가 구속되는 탄압을 받았다. 1987년 민주화 투쟁의 성과로 전노협을 비롯한 기층 대중 조직이 민주 노조 운동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속속 건설되었고 전국 교직원 노동 조합(전교조)도 건설 투쟁에 동참하였다. 1989년 전교조 합법화를 위한 단식 투쟁이 명동 성당에서 벌어졌을 때,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 협의회(민교협) 소속의 500여 명의 교수들은 대학 위원회를 결성하였고, 전교조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명동 성당 농성에 동참하였다. 그 당시 나는 초대 대학 위원장을 맡았으며, 30년만의 교육 민주화 운동의 복원에 교사·교수와 함께 하였다. 다시 10년이 지나 전교조가 투쟁의 성과로 합법화되었으나, 교수는 전교조에서 제외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였다. 이러한 민주화 운동의 과정 속에서 교수 노조는 길게는 40년, 짧게는 10여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새삼스럽게 교수 노조의 찬성 토론에 나서는 것조차 험담스러운 일이다.

1999년 1월 민교협은 회원 연수회 토론을 통해서 다시금 교수 노조 건설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는데, 특히 고등 교육법과 사립 학교법의 개악, 두뇌 한국 21 정책 등 경제 및 소유권 논리에 기초한 한국판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이 전개되는 조건과 이미 전교조가 존재하는 조건 속에서 교수 노조의 건설은 더욱 절실한 것이었다. 민교협은 교수 노조 연구팀을 구성하고 지역 간담회를 갖는 등 심도 있는 내부 토론회와 교육 관련 단체 토론회를 통하여 교수 노조 추진 기획단을 발족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드디어 올해 10월 31일 추진 기획단을 발족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구체적인 일정에 따른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결정하고 준비위 발족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제는 힘있는 교수 노조 건설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이 글에서는 민교협의 교수 노조 추진 결의문의 몇 곳을 인용하면서 교수 노조 건설의 타당성과 외국의 사례, 그리고 앞으로의 활동 목표를 제시하기로 한다.

II. 교수 노조 건설의 타당성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은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에 입각해 있다. 교육부는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무시한 채 시장 논리를 대학 사회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대학을 기업으로 보는 경영 논리를 부추기고, 국·공립 대학의 공기업화를 꾀하며, '정글의 법칙'에 입각하여 교육 재정을 분배하고,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의 제고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기초 학문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하고 있다. 중장기적인 학문 정책을 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생적인 학문 재생산 구조의 구축이라는 시대적 요청을 외면하고 있다. 더욱이 교수 노동 시장의 경직성과 비탄력성으로 말미암아 수급 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계약제 및 연봉제의 강제 도입, 임용 방식의 다양화를 통한 비정규직의 제도화, 교수 업적 평가제의 무리한 실시 등을 통하여 교수 집단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수들의 지위와 역할이 추락하고 있으며, 교수 사회에 임금 노동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지난 10여 년간 우리 사회와 교육의 민주화를 위하여 노력해 왔던 민교협은 1,500여 명 소속 교수들의 충의를 모아 교육 정책과 대학 현장을 개혁하고 교수들의 교권 수호와 신분 보장을 위하여 '교수 노동 조합'의 결성을 추진하기로 결의한다."

위에 인용한 몇 구절만 보아도 교수 노조 건설의 타당성은 입증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타당성의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신자유주의의 공세가 전세계를 관통하면서 한국 사회에 밀어닥친 것은 김영삼 정권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IMF 관리 체제 이후 김대중 정권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정착된다. 내용적으로 영·미식의 신자유주의가 유럽식 신자유주의의 외피를 쓰고

사회의 전영역에 관철되고 있으며, 대학 교육 부문 역시 예외가 아니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 수급, 공공성과 민주성을 무시한 교육 정책을 교육 개혁(?)의 기조로 삼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교육 정책은 시장 논리에 입각하여 대학의 무한 경쟁 체제를 강요하고 인기 학문을 서열화하여 기초 학문의 파괴를 자행하고 있다. 더구나 교육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제도는 정글 법칙에 의한 지인 배분을 통해서 무제한적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또한 교수 노동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고용이 불안해지고 계약제, 연봉제 및 교수 업적 평가의 자의성 등으로 교수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더구나 교수에 대한 처우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면서 교수의 노동 조건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대학 교육의 상업화, 사학 재단의 지배권 강화 때문에 교수권이 악화되고 있다.

교수의 계급적 본질은 무엇인가? 정신 노동을 기반으로 하는 임금 노동자이다. 전교조 출범 당시 선생이 어떻게 노동자인가라는 반대 이데올로기가 노태우·김영삼 정권과 보수 언론에 의해 확산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이는 노동과 노동자를 비하하는 부르조아의 권위주의적 이데올로기와 함께 노동을 불온시하는 반공 이데올로기가 교묘하게 착종되게 함으로써 전교조의 탄압을 정당화하는 기제가 되었다. 물론 교사와 교수를 차별화하는 전략을 통해서 전교조 가입 교사를 대량 해직시키면서도 교수 조합원은 한 사람도 해직시키지 않았던 노태우 정권의 분할 탄압 전술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교사와 비교했을 때 교수가 점하는 사회적 인식의 차이가 있지만 이는 교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탈계급적 허위 의식이 임금 노동자로서의 교수 집단의 계급적 동질성을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교육 개혁(?) 덕분에 비정규직 계약 노동자로서의 이권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고용 불안의 확대 심화는 교수라는 명망과 권위를 기반으로 한 상류 계급의 허위 의식을 급속하게 무너뜨리

고 있다. 물론 교수 집단 내의 분화는 계급적 동질화와 함께 진행되고 있음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용 조건의 약화가 전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국립대와 사립대 교수와 대다수 열악한 조건의 대학 교수가 분할되고 있고,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의 입안자나 동조자로 지배 계급의 일원으로 편입되려는 교수 집단과 유기적 지식인으로서의 비판적·혁신적 교수 집단의 양극화 속에서 교수 대충은 동요하고 있다.

위와 같은 주·객관적 조건 속에서 교수 집단이 새로운 형태로써 조직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고등 교육과 대학은 형해화될 운명에 놓일 것이며, 유기적 지식인으로서의 역사적 사명은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대한 수세적 방어로 전락할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70·80년대의 민주화 운동 시대에 유기적 지식인으로서의 교수 집단은 평교수 협의회 혹은 교수 평의회라는 단체를 통하여 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할 때 단순한 자문과 협의를 위한 교수 협의 기구로는 올바른 교육 민주화를 이룩하는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신자유주의가 전면화되는 시대에 접어들어 노동권과 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조직 형식은 노동 조합밖에 없으며, 이미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수의 노동 조합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아도 교수 노조의 건설은 당연하며 오히려 한국에서는 그 결성 시기가 늦었다고 볼 수 있다.

Ⅲ. 외국의 교수 노조 사례

전교조 건설 때에도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사례가 논쟁이 되었던 적이 있다. 교수 노조의 경우는 더욱더 외국 사례가 준거 틀이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교수 노조가 있는 곳이 대학에 따라 다르지만 유럽의 경우는 대부분의 국가에 교수 노조가 조직되어 있다. 특

히 북유럽은 교수 노조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스웨덴을 들 수 있는데, 스웨덴 교수 노조(SULF: Swedish Association of University Teachers)는 대학교와 단과 대학의 전문 직업자들의 연합인 SACO(Swedish Confederation of Professional Association)에 소속되어 있다. 여기에는 대학 교수, 시간 강사, 연구자 그리고 대학원생뿐만 아니라 국가 연구소의 연구원도 가입되어 있으며, 조합원은 약 17,000명이며, 대학별로 지부를 두고 있다. 스웨덴 교수 노조의 최근 주요 사업은 교육과 학문 연구에 있어서의 질의 향상 문제, 고질의 직업을 수행하기 위한 임금 제도 도입 문제, 보수 인상 문제, 박사 과정 학생에 대한 월급 지급을 위한 투쟁 등이 있다. 핀란드에는 2개의 교수 노조가 있는데 스웨덴의 SULF와 유사한 FUUP(Finnish Union of University Professors)와 FUURT(Finnish Union of University Researchers and Teachers)가 있으며, 프랑스에는 SNES-FSU, 독일에는 GEW(Gewerkschaft Erziehung und Wissenschaft)가 있다. 영국에는 2개 노조에 교수가 조직되어 있는데 하나는 AUT(Association of University Teachers)이고, 다른 하나는 NATFHE이다. NATFHE는 대학, 단과 대학, 평생 대학에서 가르치거나 연구하는 영국, 웨일즈 및 북아일랜드의 교수와 연구자가 가입되어 있는데 약 65,000명의 조합원이 있다.

유럽과 같이 교수의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에서 강력한 교수 노조가 결성되어 있고, 교육과 학문 연구의 정책과 방향 제시뿐만 아니라 교수 신분 보장을 위한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 우리 사회에서의 교수 노조에 대한 그릇된 관념이나 교수 사회 내부에서의 허위 의식을 극복하는데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유럽과 같이 교수의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에서
 강력한 교수 노조가 결성되어 있어,
 우리 사회에서의 교수 노조에 대한 그릇된 관념이나
 교수 사회 내부에서의 허위 의식을 극복하는데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

Ⅳ. 교수 노조의 활동 목표와 앞으로의 과제

교수 노조는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의 원칙을 확립하고 대학 자치와 학문의 자유를 신장시키며, 교육 및 연구 인프라의 확충과 학문 재생산 기반 구축을 꾀하고 교권 수호와 교수 신분 보장을 위한 활동을 주요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를 크게 대학 교육 개혁과 교수 권익 옹호라는 두 가지 목표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대학 교육 개혁이라는 목표는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이라는 원칙이 교육 정책 수립 과정 및 교육 현장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서, 가장 중요하게는 비리, 유착, 관료적 통제, 은폐의 관계로 상호 결합되어 있는 '정관학 복합체' (사학 소유 회원, 부패 교육 위원, 청와대, 로비 가능 위치의 정치 임명직의 정치인, 교육부 관료, 이와 유착된 사립 대학 재단과 국·공립 대학)를 해체하고 공공성, 민주적 협력, 공공적 정책 지향, 개방성, 투명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대학 교육의 지배 구조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교수 권익 옹호라는 목표는 대학 교육 노동 환경의 악화 경향, 그리고 그 경향을 더욱 심화시키는 신자유주의적 대학 구조 조정 과정에서 교육 및 연구의 기본적인 질 확보에 필요한 안정적인 노동 조건의 확보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교수 노조는 교수 업적 평가 제도 및 인사 제도의 쇄신을 비롯한 교수의 신분 안정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자율성과 공정

성이 관철되는 평가 제도, 교수 계약제와 연봉제에 대한 대안, 교권 수호와 신분 보장을 위한 방안 등을 강구할 것이다. 이 밖에도 학문 후속 세대의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시간 강사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들과 연대하는 활동, 그리고 전반적 교육 개혁을 위하여 모든 대학 교육 관련 단체 즉, 민교협, 사교련, 국교협, 전국 교수회, 대학 노조 등과 공동 투쟁을 조직화하고 전교조 및 교육 관련 단체와 연대 사업을 해야 한다. 나아가 사회 민주화 및 구조적 개혁을 추구하는 민주 단체에 정책 역량을 공급하고, 민주주의 아카데미 사업 등 진보적 민주주의를 위한 사회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 대학 교육 개혁과 교수 권익 옹호라는 두 가지 목표의 비중을 어떻게 둘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대학 교육 개혁의 과제를 핵심적 목표로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왜냐 하면 첫째, 전문 연구직이라는 교수의 존재적 특수성이 사라져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즉, 교수 집단은 대학 교육 개혁의 비전을 제시함과 아울러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을 전국적이고 총체적 시야에서 수행해야만 하고 교수 집단 자신의 영역에만 함몰될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민주화에 기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국민 대중의 여론을 고려할 때 교수 신분 문제가 중심 목표로 부상하면 집단 이기주의로 공격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물론 집단 이기주의에 대한 여론의 공세에는 정면으로 대응해야 할 명분과 타당성, 그리고 현

실성을 확보해야 한다. 세 번째로 대학 교육 개혁의 목표가 불확실하면 신분 안정에 매몰되는 일반 노조적인 행동 패턴이 전면에 부상할 수 있는데, 일부의 반개혁 지향적 교수들이 무임 승차, 혹은 '보험' 논리로 가입하여 노조의 활동력과 활동 방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협의체로 조직화되어 있는 교수 협의회는 교수 노조와 상호 보안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보기를 들어 단위 대학에 있어서 교수 노조가 대학 교육 지배 구조의 개혁이나 정책 문제를 자기 영역으로 하는 반면, 교수 협의회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대학의 이슈를 중심으로 학내 정책 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자기 영역으로 하는 역할 분담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법 개정 청원 운동과 교수 노조 건설 운동을 힘차게 벌이는 일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이제 민교협은 국회에 헌법이 보장한 교수 노조의 결성을 가로막는 국가 공무원법 제 66조와 사립 학교법 제 58조의 개정을 청원하였으며, 교수 노조 준비위 구성을 위한 홍보, 지역 순회 간담회 개최 등 구체적 활동에 돌입하였다. 이제 40년만에 교수 노조가 성립되는

역사적 사건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람시가 말한 유기적 지식인의 본격적 역할을 기대하는 시점에 우리는 서 있다. 신자유주의적 교육 파탄에 맞서 올바른 대학 교육 개혁과 교육 개혁 그리고 나아가 올바른 사회 개혁의 일익을 담당할 교수 노조의 앞날을 기대해 본다.

■

오세철

연세대 상경대학 상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연세대 산업경영연구소 소장, 인문사회과학 학술지 「현상과 인식」 발행인, 자주, 민주, 통일 국민회의 정책 실장, 전국 교직원 노동 조합 대학 위원회 위원장, 민중정치연구소 소장, 한국경영학회 회장, 연세대 상경대학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총 파업 노동자와 함께 하는 민중연대투쟁위원회 상임 대표를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 「맑스주의, 조직의 정치경제학, 그리고 한국 사회 변혁」, 「동구제국의 사회와 문화」, 「현대 사회의 조직과 변동」, 「한국인의 사회심리」 등이 있으며, 역서로 「조직 사회학」, 「프시즘의 대중 심리」 등과 논문으로 「북한 문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의 다수가 있다.